남북관계 개선 협력…FTA 속도 내고 전자상거래 장벽 철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

교육장관회의 교육협력 확대
인구 15억 디지털 시장 조성
신기후체제 출범 긴밀 공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국제관계는 물론 사회·경제·문화 분야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북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 약속**=한중일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대한 공헌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 8월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 8·25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고,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은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과 관련해선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최에 따라 스포츠 협력과 경험 공유를 위한 3국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중일 3국 간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의 조성이 추진된다.

3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이 같이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우선,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현재 3국은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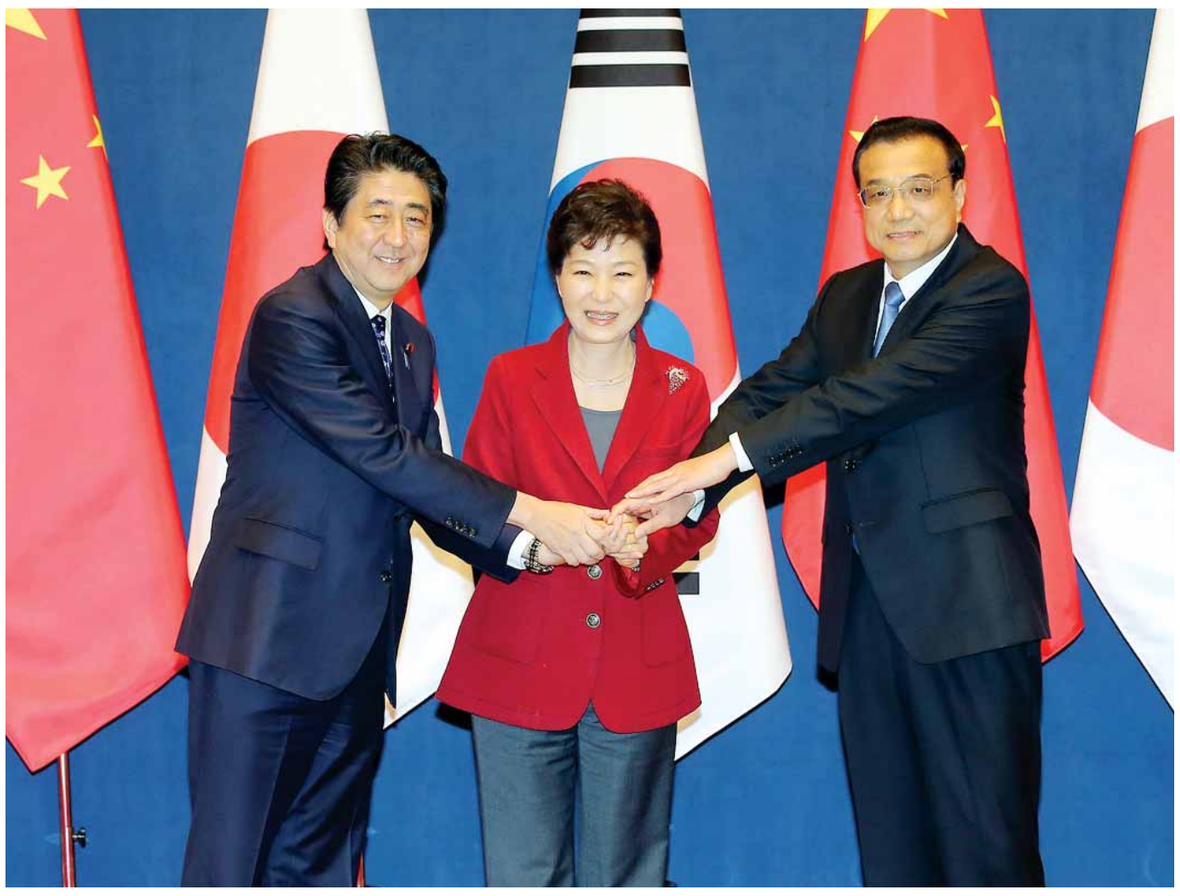
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은 관련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에도 나섰다.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문제 등 별다른 성과 못 낼 듯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제 최종조율 시각차 못 좁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2일 서울에서 열리지만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핵심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물론 다른 쟁점들에서도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다음날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막판까지 시각차 좁히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막판 협의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0일 박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올해 내에 타결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아베 총리를 향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이다.

하지만,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이 이에 대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제까지 밝혀온 대로"라고 '입장불변'을 표명하면서 오리무중의 상황이 예상됐었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민감 현안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회담에서는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물론, 한일 FTA 등 경제 현안과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다른 쟁점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한국에 할 말은 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중 정상회담…삼계탕·김치 수출 길 열었다

年27억달러 로봇시장 열려
양국 FTA 연내 발효 노력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한반도 통일문제 등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간 27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인 중국 로봇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길이 열리는 등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불법어업방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키로 하고 ▲쌀·삼계탕·김치 중국 수출 길을 열기로 하는 한편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정기관 TK 독식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
이석기 내란음모 등 지휘
野 "TK 외 검사 없나"

지난 30일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은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기획 능력도 인정받고 있으며,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판사로 3년간 일하다가 전직해 수사·기획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또 강신명 경찰청장의 고등학교 선배다. 대구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가 2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맡게 됐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고흥·16기)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으로 현 집권 후반기에 대비해 정부 조직 내 사정기관 및 지휘체계 라인업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국무총리로 임명된 황교안 총리(경남 창원, 사법연수원 13기)와 대구 출신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김현웅 법무장관을 사이에 두고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이번 인사가 호남 출신 법무장관을 견제하려는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검찰의 주요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독립성의 훼손 우려가 있는 'TK 편중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대검 차장은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며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